



박숙자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

저출산, 해결방안 없나?

최 근 언론과 정부부처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들 중 하나가 저출산 현상에 관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60대부터 정부주도로 추진해 온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 여성이 전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총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명이었으나 1983년에는 인구대체출산율인 2.1명에 달했다가 지난 2000년에는 1.5명, 그리고 2001년 1.3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인구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가족계획사업을 접고 1996년부터 모자보건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충북 청원군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출산장려 차원에서 아기를 낳은 여성 주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다산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던 우리사회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단기간내에 급격히 떨어지게 된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지난 40여년간의 출산율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로 자녀를 적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자녀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결혼시기와 출산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독신으로 남는 비혼(非婚)율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적인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자녀 가치관은 이제 우리사회의 보편화된 대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1~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딸하나만 낳고 단산하는 부부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기혼여성들의 소자녀 출산이 1980년대까지는 출산율 저하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섬으로써 1990년대 부터는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에 별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결혼시기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취업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합계출산율도 계속 저하될 것이다

와 출산시기의 유예 및 비혼(非婚)인구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사실상 지난 10년 사이에 남성의 초혼연령은 28.0세에서 29.6세로, 여성의 초혼연령은 24.9세에서 26.8세로 약 2년 정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여성들의 가임기간도 단축되므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눈여겨 봐야 할 점은 결혼을 하기 보다 독신을 선택하는 비혼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초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수)이 1980년에 10.6이던 것이 1990년에는 9.3, 1995년 8.7로 낮아지다가 1998년 8.0, 1999년 7.7, 2000년 7.0, 그리고 2001년 6.7로 최근들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독신으로 남아 출산을 전혀 하지 않는 여성들이 증가할수록 우리사회의 평균적 합계출산율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우리사회의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혼인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직 발표된 정확한 연구결과는 없으나 여성들의 취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요즈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곧 취업과 결혼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취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성들이 받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오는 기혼여성

들의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거나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바로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다.

2001년도에 발간된 매킨지사의 「우먼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1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요즈음 젊은 여성들의 취업욕구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향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임신과 출산 및 육아문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취업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합계출산율도 계속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작정 아이를 많이 낳도록 지원하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 부양인구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이에 따르는 자녀양육 문제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훌륭한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RISK